

대선 정국 전초전...巨野 힘 발휘할까

오늘 20대 첫 정기국회 개막

‘우병우·사드·조선업 청문회’ 등 곳곳 지뢰밭

여야 정쟁 속 민생·경제 현안 표류 우려도

제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가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여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여소야대(與小野大)와 ‘3당 체제’ 속에서 맞게 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3당은 대선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에서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대선 국면에서 자칫 수세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박근혜 정부 후반기 남은 국정과제를 입법화할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막판

스퍼트를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소야대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 심의와 입법 활동에서 여권의 독주를 저지하고 야권의 정책 기조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각오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각종 현안과 이슈가 산재해 있어 각 상임위에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백남기 청문회, 무상보육 예산, 한일 위안부 협상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런 가운데 추가경정 예산안조차 합의 시한 내에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여야의 갈등은 격해진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서비스 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비롯한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수적으로 우세한 야권의 반대는 물론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각종 의혹 사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여당이 ‘정적 드라이브’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반면, 야권은 정권 탈환을 위해 입기 후반기에 접어들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파산 공세를 퍼부어 전망이다.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권 핵심부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제동을 걸 준비를 마쳤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보

유하고 국회의장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지난해 정기국회 때까지와는 달리 지금은 여당이 소수가 됐고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국회법 개정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부속, 당일 처리됐지만, 올해는 지난해처럼 12월 1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미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두 차례나 추경안 처리 시한을 정했지만, 예결위 심의 도중 야당에서 새로운 증액 요구가 나오면서 합의 시한에 처리가 되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는 대선 정국을 앞둔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여야의 기싸움이 상당할 것”이라며 “여야의 정쟁 속에서 민생 및 경제 현안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추경, 결국 달력 넘겼다

누리과정·개성공단 피해지원

입장차 커 임시국회 처리 무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8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과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 예산 등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 3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추경 처리를 위한 협상을 계속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여당 측은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지난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단독 처리한 누리과정 예산을 문제 삼고 있다.

교문위 야당 의원들이 사·도교육청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예산 6000억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은 이날 2000억원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3000억원 이하로는 내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고, 국민의당은 중재안으로 2500억원 편성을 제안했지만 협상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 예산을 놓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다. 야당 측은 개성공단 철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예산 700억원을 배정할 것

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 측은 신고가 된 피해금액은 이미 지원을 마쳤으며 추가 지원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날 중 본회의는 사실상 열리기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합의 이르지 못한 이유는 정부·여당이 민생예산을 증액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반영하는 안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부실한 대기업과 은행에 수조 원을 퍼주는 것은 편하게 생각하면서 국민 민생예산 500억원, 1000억원 증액에 야박하게 구는 정부와 여당을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이 늦어져도 될 정도로 간단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간이 기업인과 일자리의 생명”이라며 “한마디로 응급환자를 실은 119구급차를 가로막고 있는 차와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에서 “어차피 오늘 예결위 소집이 어렵기 때문에 저녁 9시 30분 내내 대표들이 내일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정 노력을 할 것”이라며 추경안 처리 지연을 놓고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소야대 진풍경...여당 없는 청문회

새누리, 교문위 추경 처리 반발

조운선 청문회 야당만 참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지난 31일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이 여당 단독으로 이뤄진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여당이 거부한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소야대’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진풍경인 셈이다.

이날 야당 단독 인사청문회는 지난 29일 야당이 교문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여당이 강력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야당 단독 인사청문회에 대해 여야는 또다시 ‘내 탓 공방’만 벌였다.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유성업 위원장은 상임위 운영을 독단적으로 진행해 파행으로 이끌고 갔다”면서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회의 개시) 50분이 지나도록 안 들어오고 있다.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다”며 “회의의 거부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운선 장관 후보자



당 빈 여당 의원서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야당이 교문위 소관 추경안을 단독 표결 처리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청문회를 시작하지 못하다가 오후에 속개됐지만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는 게임산업의 ‘셋다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 “청소년 보호와 콘텐츠 산업 육성 사이의 최적의 접점을 찾겠다”고 답했다. 또 조 후보자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에 대해 반대의 개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도

는 “건국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의당 “국민참여경선으로 대선 후보 선출”

국민의당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는 대선 후보를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한다는 당헌을 확정했다.

지난 31일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가 국민참여경선으로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며 “1일 위원회 차원에서 브리핑을 하고 오는 5일 비대위의 의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당원과 국민선거인단 비율 등을 담은 당규 부분이다. 위원회는 오는 8일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대선 후

보 선출을 위한 당규를 확정할 뒤, 비대에 보고할 방침이다.

당원과 국민 선거인단의 비율은 ‘50대 50’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의견 확대를 위해 선거인단 비율 등을 당규로 못 박기보다는 추후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헌과 당규를 확정한다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외교차관, 전격 중국 방문...한중 정상회담 개최 조율

한중간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31일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교부는 임 차관이 9월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관련 전반적인 사전준비

와 점검을 위해 이날부터 1일까지 베이징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오전 출국했으며, 오후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임 차관의 방중은 G20 정상회의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최종 조율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